5.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제1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186

제2절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198

제3절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217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28

제1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개도국과 선진국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기후변화, 난민 발생 및 HIV/AIDS 등 전지구적 대응을 요하는 과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이행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90여개 회원국의 정상 및 정부수반 등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회의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국제개발협력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한승수 대통령 특사가 참석하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증여는 개도국에 상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무상 자금 공여이며, 양허성 차관은 상환 의무를 부과하나 조건이 완화된(증여율 25% 이상) 융자이다. 증여는 무상원조로,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한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시 채택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개발 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2001년 9월 유엔이 채택
- MDGs는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 목표로, 8개 주요목표, 21개 상세목표 및 60개 달성지표로 구성
- MDGs 8대 목표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③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 유아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에이즈 등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 ODA 확대 추진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도에 총 8.16억불의 ODA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5.81억불(71%),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2.35억불(29%)을 기록하였고, 양자원조중 무상원조가 3.67억불(63%), 유상원조가 2.14억불(37%)을 각각 기록하였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09년도 ODA는 GNI 대비 0.1%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원조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를 0.15%,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수차례 공약한 바 있다.

2009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 백만불, 순지출 기준)

	2008년	2009년
ODA 총액	802	816
양자원조	539	581
- 무상원조	369	367
- 유상원조(EDCF)	170	214
다자원조	263	235
ODA/GNI	0.09%	0.10%

* 출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보고

2. ODA 선진화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신규 가입국으로서, 우리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ODA 통합추진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ODA 전략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향후 5년간 ODA 중기계획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ODA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우선 우리 정부 최초의 ODA 전략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분야별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의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되었다. 동 전략보고서는 우리 ODA 정책의 3대 선진화 전략(개발협력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을 제시하고, 유·무상 원조를 통합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26개국)하여 ODA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였다.

2)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동 전략보고서를 기반으로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마련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향후 5년(2011-2015)간의 중기 ODA 계획으로, 2010년 12월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무상원조 및 유엔/기타 국제기구 다자협력분야 기본계획은 2011-2015년간의 전략목표, 추진방향, 재원규모 및 운용계획, 원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및 긴급구호 확대,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기본계획은 그간 우리 원조 시스템의 문제였던 무상원조의 중복성·분절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협력대상국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조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동 기본계획에 따라 그 동안 예산상 제약으로 우리의 경제력,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등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긴급구호 규모 역시 2015년까지 전체 ODA의 6%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ODA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현지 ODA 협의체 구성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에 따른 일관된 전략하에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2010년 11월 구성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ODA를 실현하기 위해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를 2010년 10월 협력대상국 재외공관에 설치하였다.

2010년 7월 26일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9년 이후 무상원조 지원 실적이 있는 기관(부처, 위원회 및 청 단위)이 참석하여 무상원조 사업계획의 협의·조정 및 무상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는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협력대상국 현지에서의 여러 ODA 시행기관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의·조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ODA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현지 ODA 시행기관 관계자들(KOICA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주재원, KOTRA 등)이 각 기관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제 구축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측정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무상 통합 평가지침을 마련(2009.12)하고, 2010년에 동 지침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원조체제 전반을 평가한 국별평가, 유·무상 연계사업의 효과성 평가, 새마을 운동 전수사업 평가 등 3가지 시범평가가 이루어졌고, 통합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지속적인 시행 및 결과반영을 통해 우리 원조체제를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 노력

2010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회의 계기에 '혁신적 개발재원' 부대행사가 개최되었고, 제65차 유엔 총회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

우리 정부는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의 일원으로서 제3대 의장국을 역임(2007년 3-9월)하였고, 2007년 9월 항공권연대기여금(국내명칭: 국제빈

1) '혁신적 개발재원'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으로서 항공권연대기여금, 국제백신개발채권, 국제금융거래세 등이 시행 또는 논의중이다.

곤퇴치기여금[2])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최빈개도국의 질병과 빈곤퇴치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질병퇴치 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HIV/AIDS·결핵·말라리아 3대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오랜 현장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리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질병퇴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국내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시행하였다.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08년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고 있는 탄자니아 므완자 지역의 소외열대질환사업 성과를 취재, MBC 뉴스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혁신적 개발재원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의의와 성과를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7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 및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총회에 참석하여, 혁신적 개발재원 도입·운용을 통한 ODA 선진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 교육분야 T/F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의 지평을 보건분야에서 교육분야로 넓히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3. OECD DAC 활동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DAC은 전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90%를 담당하는 선진 공여국 포럼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규범 제정, 원조정책 조정, ODA 재원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DAC에서 수립되는 원조 규범이나 지침 등은 회원국들의 원조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준거가 된다.

한국의 DAC 가입은 최빈개도국으로서 원조를 받던 국가가 선진 원조 공여국 협의체

2) 출국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모금되는 재원을 개도국의 질병 및 빈곤 퇴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의 국내명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매당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일반석/비즈니스/일등석간 차등적으로 적게는 1유로 많게는 4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에 가입한 첫번째 사례로서, 그간 ODA분야에서의 우리의 확대된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선진 공여국으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개발 원조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DAC의 권고사항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ODA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선진화 방안」, 「유·무상 원조 기본계획」 등 우리 개발원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법적·제도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0년에 정식 회원국 자격으로 DAC내 개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0년 4월 고위관리회의(Senior Level Meeting)에 이어, 원조효과작업반 등 DAC 산하에 있는 2개 작업반 및 6개 네트워크 논의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DAC 회원국인 일본의 개발정책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우리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국으로서 DAC의 핵심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문제를 다루는 '원조효과작업반회의(WP-EFF: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의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작업반 상임위(EXCOM)의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 원조효과작업반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으며, 우리는 동 회의 개최국으로서 회의 준비 및 논의방향 설정 등과 관련된 의장단 협의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 확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확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1991년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출범하여 2010년에 2009년 대비 62.2% 증가한 총 4억 5천 4백만불(잠정)의 무상원조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였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빈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아시아 지역(오세

아니아 포함)에 대해서는 전체 양자 지원액의 56.8%에 해당되는 2억 4,70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9년 6,077만불에서 50.5% 증가된 9,144만불을 지원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천명한 이래 무상원조 지원규모를 2005년 1,572만불에서 2010년 6,770만불(잠정)로 약 4.3배 확대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구축 지원규모를 2009년 3,946만불에서 1억 1,790만불로 3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2010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10)에서 26개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양자 무상원조의 70%를 동 중점협력국에 지원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08-2012년간 총 2천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지원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계획을 2008년 7월 G8 정상회의시 천명하였고, 2008년 20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도에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가) 이라크 재건지원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3-2007년간 총 2.6억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 5월 이집트 개최 '이라크와의 국제협약(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회의' 시 2008-2011년간 총 2억불(유·무상 각 1억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르빌 지방정부의 재건 및 경제개발 등을 통한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재건 복구 지원팀인 '아르빌 지방재건팀(RRT: 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출범시킨 후, 총1,800만불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하는 등 당초 파견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2008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하였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라크의 국가개발계획(NDP 2010-2014년) 및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 및 교육(기초교육, 직업훈련 등)을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면서, 연수생 초청과 같은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및 이라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아프가니스탄 평화구축 지원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1-2010년간 약 1억 8천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8년 6월 파리, 아프간 원조공여국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2009-2011년간 3천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9-2010년간 지원액이 약 1억 1,770만불에 달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동 서약액을 초과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동의·다산 부대 철수 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기존 동의·다산부대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하고 2008년 6월 30일 개원하여 매일 약 7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원 이후 매월 약 1,300명의 민간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7월 1일부로 아프간 동부 파르완(Parwan)주에서 한국 PRT 사무소가 공식 임무를 개시하였다. 우리 PRT는 민간 100명, 경찰 40명, 군 320여 명 등 총 4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르완주의 지방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PRT는 교육·보건의료·농촌개발·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의료사업·직업훈련사업·아프간 공무원 방한초청 사업·경찰훈련 등 다양한 재건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1년 1월에는 우리 PRT의 독자적 기지 구축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PRT가 활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 PRT는 금년에도 더욱 다양한 재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프간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간 한국 PRT 사무소 개소식(2010.7.1)

(다) 팔레스타인 재건지원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개발과 안정을 지원하고 중동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1991-2010년간 약 3,037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2005년 10월 한·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시 600만불 지원을 약속하였고, 2007년 12월 팔레스타인 원조공여국회의 참가시에는 2008-2010년간 2천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 계획을, 2009년 3월 가자 재건지원 국제회의에서는 2009-2010년간 2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 서약을 발표하여, 성실히 이행한 바 있다.

동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교육·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및 IT 직업훈련센터·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팔레스타인의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2008년부터 3년간 팔레스타인 공무원 및 전문가 200여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기술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 및 복구가 항구적인 중동 평화 달성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 재건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3) 아프리카 개발협력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우리의 중요한 협력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발전 및 국제사회의 MDGs 달성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아프리카 ODA 지원규모는 2005년 대비 약 2.5배 확대된 1억불, 무상원조는 4배가 확대된 73.5백만불에 이르렀다.

또한 200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계기에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ODA 지원규모를 '12년까지 '08년 지원실적 대비 2배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2009-2012'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기본구상'에 따라 2012년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는 약 2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연수생 5천명 초청, 1천명의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아프리카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통합 파견

우리 정부는 2009년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국가대표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 파견

을 위해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를 출범시켰다. 브랜드 통합에 이어, 2010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 및 중장기자문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봉사단 및 과학기술자문단, 행정안전부의 IT 청년봉사단, 지식경제부의 퇴직전문가 사업 등 총 4개 부처 6개 사업예산을 2011년부터 KOICA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2011년에는 총 4,032명의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5) 전략적 다자개발협력체제 구축 및 이행

우리 정부는 양자원조와 함께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MDGs 달성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고, 분쟁·재해 관련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 주요 개발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와 함께 양자차원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UNDP와의 협력 관련, 'UNDP 서울정책센터'가 2010년 12월 3일 정식 개소했으며, 앞으로 신흥공여국간 정책협의 및 개도국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지식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제5차 한·UNDP 연례 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G20 개발의제 후속 조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제1차 한·UNDP MDG 신탁기금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신탁기금 1호 지원사업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대상 '북키부주 커뮤니티 복원 및 평화정착사업'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ECOSOC 조직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WF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11-12년간 우리 정부의 인도지원 분야 중점 협력 대상기구인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Josette Sheeran WFP 사무총장이 방한(10.27-28)하여 외교부·농림부·통일부 장·차관을 면담하고, 한·WFP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UNICEF와는 2009년 체결된 기본협정에 따라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분야에 있어 UNICEF와의 협력관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동과 여성의 생존권 보장에 주력하는 UNICEF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기초면역 강화사업 및 방글라데시 모자보건사업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착수를 위해 2010년

중 KOICA-UNICEF간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리는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에 2008년 12월 가입한 이래 동 네트워크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평가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의 다자기구 활동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5.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피해자들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교통상부가 해외긴급구호시스템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고, 2010년 5월 해외긴급구호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과 군 수송기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0년 5월에는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긴급파견시스템 구축, 긴급구호활동 전문성 강화, 효율적 인력 지원체계 구축, 국내 민간구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예산 확대 등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또한 ODA 선진화 방안 및 ODA 무상원조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ODA 예산 중 해외긴급구호 비중을 6%로 확대키로 하였다. (2010년 잠정치 약 0.7%)

그간 우리나라는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가자사태, 멕시코 신종인플루엔자, 2010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파키스탄 홍수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에 대해 긴급구호대 파견·구호품 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구호를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 및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 10월 유엔인도지원조정실 공여국그룹(ODSG: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onor Support Group) 가입, 2007년 7월 국가별 인도적 지원문제를 토의하는 협의체인 인도적 지원 연락그룹(HLWG: Humanitarian Liaison Working Group) 가입에 이어, 2009년 7월에는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그룹(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도 가입하는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수립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여타국과 조율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긴급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006년 출범된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 출범 초기부터 아시아 지역 주요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만성적·긴급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해 유엔이 통합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합동지원요청(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에도 지속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조율 및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6. 향후 과제

국제원조의 최대 수혜국에서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선진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과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을 제고해 나가면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적극 주도하고 ODA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1. 유엔과의 관계 강화

2010년에는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 사안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가 채택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7월 9일 천안함 폭침(3.26)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였고, 또한 12월 19일 긴급회의를 개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11.23)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0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5차 유엔총회에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에서 개발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비확산, 유엔 개혁 등 주요국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 G20 정상회의 (2010.11) 준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유엔측 고위인사로는 알리 압두살람 트레키(Ali Abdussalam Treki) 제64차 유엔총회의장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한하였다. 트레키 총회의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 등을 예방하고, 유엔 개혁 등 주요 유엔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방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 관련 국회 행사 참석 및 다수 언론사와의 인터뷰 일정을 가졌다.

한편, 린 파스코(Lynn Pascoe)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대북 특사자격으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등을 면담하였다. 파스코 특사는 방북전후 우리나라를 방문, 방북 활동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국제기구 진출

우리나라는 2010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여성통합기구(UN Women),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등 여러 국제기구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 국민의 유엔 체제내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였다. 유엔 주요 인권협약 감독기구인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신혜수 위원이 선출되었고, 김형식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되어 유엔 내에서의 인권분야에 우리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어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ESCAP 사무국 환경개발국장직에 임명되고, 하동우 ESCAP 사무국 교통인프라과장은 교통국장직에 임명되었다.

장만희 現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은 3회 연속 ICAO 항행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어 민간항공 외교 분야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병열 박사는 세계기상기구(WMO) 농업기상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되었고, 임규옥 박사는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한필수 박사는 IAEA 방사성·수송·폐기물 안전국장직에 임명되는 등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규모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능력과 자질, 국제 감각을 갖춘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시행,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유치,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17개 기구에 139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12월에는 51개 기구에 353명에 달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0년 외교통상부는 유엔사무국,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봉사단(UNV)의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제3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Job Fair fo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UN System)」를 2010년 6월 7일 경희대, 2010년 6월 9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전국 100여개 이상 대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1,800여명(서울 1,100명, 부산 700명)이 참석하여 각 기구별 채용정보를 자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밖에도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은 방한 계기에 유엔 사무국 모의면접, 유엔개발계획(UNDP) LEAD 프로그램 예비후보자 면접, 유엔아동기금(UNICEF) 성평등전문가 면접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1996년 이래 평균 5명 수준으로 파견해오던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를 2011년에는 15명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더욱 넓어졌다.

※ UNDP LEAD(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 UNDP가 차세대 개발전문가 및 간부 양성을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P-3급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현황

직위구분	국제기구
이사/위원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 대륙붕한계위원회, 유엔분담금위원회, 국제사법통일기구, 국제해사기구, 세계기상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민간항공기구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기타 사무국고위직	코트디부아르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사무차장급), 유엔인권차석대표, 유엔 사무총장비서실 차장(사무차장보급), 유엔 정보통신사무차장보, 유엔환경계획(UNEP)아태지역사무소장,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짐바브웨 사무소장, UNESCO 아태지역사무소장, 유엔 인도·파키스탄 감사단(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단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사무소장, 국제해사기구(IMO)예산부국장, IMO 협력부국장,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지역 사무소장, 유엔거버넌스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발전국장,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 안전국장,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mation and Commucation Technology) 소장, ESCAP 교통국장, ESCAP 환경개발국장, 유엔개발계획(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 우리 정부의 비용 부담하에 젊은 인재를 유엔 등 국제기구에 1~2년간 수습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기여를 제고하고,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 1996년 이래 2010년 말까지 73명의 JPO를 선발하여 UN, WFP, WHO, UNDP, UNV, UNEP, UNICEF, UNIFEM, UNCDF, ILO 등 주요 국제기구에 파견
- 2010년말 현재, 파견기간이 만료된 JPO 58명중 총 48명이 해당 국제기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

유엔 국별경쟁시험(NCRE)

- 유엔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수(지리적 배분원칙이 적용되는 직위에 한함)가 재정분담금 규모 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우리는 1992년 이래 2010년까지 유엔 국별경쟁시험을 13차례 유치하여, 그간 우리 국민이 58명 합격하였으며, 그 중 38명이 임용되는 등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
- 2010년 12월 1일 서울에서 시행된 시험에 행정, 인구통계, 경제, 인권, 법무, 라디오방송제작, 안전, 통계, 웹디자인/개발 부분에 124명 응시

국제기구 채용 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

- 연중 수시로 국제기구 공석정보 등 국제기구 진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의 충실도를 높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진출 인프라 구축

4.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은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엔의 주요 임무중 하나로서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9만 5천명의 군·경과 민간인 2만 5천명이 참여했으며, 연간 예산도 유엔 정규예산의 3배 이상인 78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10대 기여국이며, 인적 참여에 있어서는 116개 PKO 파병국가중 31위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명의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총 17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으며, 레바논(UNIFIL)에 359명 규모의 동명부대 및 아이티(MINUSTAH)에 240명 규모의 단비부대 등 총 11개 평화유지활동임무단에 645명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에는 아이티에 단비부대를 신규 파병하였으며, 단비부대의 신속한 재해복구 활동은 아이티 복구 및 재건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동명부대 및 단비부대 파견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는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평화·안보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 장병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민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른 파병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2010년도에는 우리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1천명 범위내 유엔 PKO 파병에 대해서는 파병규모, 파병지 등 파병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가 유엔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엔 PKO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비부대 2진 파병(2010.8)

우리나라는 유엔 PKO 관련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2010년 2-3월 개최된 '유엔 PKO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평화유지활동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서울개최 회의에는 약 30개국 외교부, 국방부 등 평화유지활동담당관 및 유엔, NATO 등 국제기구 담당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유지활동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PKO 참여현황 (2010년 12월 기준 645명 파견, 31위)

국가(지역)		임무	규모
인도·파키스탄(UN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군옵저버 10명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옵저버 1명 / 참모장교 1명
아프가니스탄(UNAMA)		재건지원	군옵저버 1명
수단(UNMIS)		정전감시	군옵저버 6명 / 참모장교 1명
네팔(UNMIN)		치안유지	군옵저버 4명
레바논(UNIFIL)	동명부대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군 359명
	사령부		참모장교 5명
			서부여단 참모 5명
수단다푸르(UNAMID)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옵저버 2명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경찰 4명
코트디부아르(UNOCI)		정전감시	군옵저버 2명
서부사하라(MINURSO)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옵저버 2명
아이티(MINUSTAH)		치안유지 및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지원	군 240명 참모장교 2명
총계			645명

5. 인권·민주주의 증진에의 기여

1)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활동

인권이사회는 2010년 3월, 6월, 9월 세차례의 정기회기와 아이티와 코트디부아르 관련 두차례의 특별회기를 개최하였다. 3월에 개최된 제13차 인권이사회는 2009년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내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을 개별 심의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실시하여, 2010년중 미국, 이란을 포함한 47개 유엔회원국(아이티는 재난복구 이후로 연기)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인권이사회 창설시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2008년 재선되어 현재는 2008-2011년 임기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전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

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2010년 3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작년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7일 실시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최종보고서 채택시, 북한이 권고사항에 대해 수락여부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4년마다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활동

2) 유엔총회에서의 활동

2010년 제65차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고문 방지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권·극빈 문제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전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아동·장애인·노년층·난민 등 취약 계층의 인권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아울러 북한, 미얀마 및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2005년 이래 매년 표결로 채택되어 왔으며, 특히 2010년에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증가(5개국)하고 반대국이 감소(1개국)하여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2008년에 이어 동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하였다.

미얀마, 이란 인권결의안에는 각각 찬성(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기권 투표하였다. 이란 결의안의 경우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란이 불처리동의안(no action motion)을 상정하였으나, 큰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토의 자체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남용되는 불처리 동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

3)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지역협력체로는 민주주의 공동체(CD: Community of Democracies),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APDP: 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발리 민주주의 포럼(BDF: Bali Democracy Forum),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PDG: 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2000년 민주주의 공동체(CD) 창립이래 공동주도국(총 17개국)의 일원으로 참여해오면서, 2002년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7월 2-4일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공동체 1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는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6개 실무그룹의 하나인 지역협력 실무그룹(W/G on Regional Cooperation)의 공동의장을 루마니아와 함께 수임하여, 민주주의 공동체 1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계기에 지역협력 실무그룹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0년 12월 9일에는 우리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BDF)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주제로 열린 고위급 세션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동주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는 2008년 10월 제1차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APDP) 고위급 회의 유치이후, 동 협력체 의장국을 수임해오고 있는 바, 2010년 8월에는 솔로몬 아일랜드 선거참관 활동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 협력체(PDG)의 창립회원국으로서 운영그룹 회의(Steering Group Meeting) 참여 및 재정기여(2008-2010년간 30만불)를 통해 취약국가의 민주제도 및 거버넌스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CD(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주의 확산 및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해 2000년 창설된 범세계적 민주주의 협력체
BDF(Bali Democracy Forum):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한 고위급 지역협력 포럼
APDP(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아·태지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2008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거참관단 파견 등 추진
PDG(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국가핵심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약한 민주주의 지향국가들을 선진국, 다자기구 등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창설

4)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우리나라는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인권증진 경험과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2010년 3월 뉴욕에서 북경행동강령 채택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수석대표: 여성부장관)하여, 여성권리 증진 및 역량강화 관련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 인권분야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우리정부의 유엔 내 여성관련 업무와 기능을 통합한 'UN Women'의 출범과정에의 적극 참여 등 여성인권 분야에의 높은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2010년 11월 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2010-2013년 임기)으로 당선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집행이사국으로서 2010년 UNICEF 집행이사회 및 제7차 한·UNICEF 양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교육 등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난민보호를 위한 국내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26-27일간 유엔난민기구(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난민신청자 및 난민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회의(Sub-Regional Roundtable on Alternatives to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4-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난민 보호 노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명간 연대(Alliance of Civilizatio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3차 문명간연대 포럼에는 최경림 주브라질대사가 참석하여, 우리의 다문화 정책을 소개하고, 문명·문화·종교간 관용의 문화 창설과 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6.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 WMD 관련 군축·비확산 활동

국제사회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협 증대에 따라 핵비확산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에는 2010 NPT 평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2000년 평가회의 이후 10년 만에 핵비확산조약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핵비확산조약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포함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최종 결과문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최종 결과문서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안보리결의에 따른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아울러 2010년 4월에는 핵테러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참석 정상들간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핵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조치 및 국제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국들은 회의 결과, 핵안보 강화를 위한 '정상성명'과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을 채택하고, 2012년 차기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으며,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지난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주도하는 한편, 핵안보 규범의 확대 심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2010.4.13, 워싱턴)

한편 NPT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는 6자회담과 E3+3(영·불·독+미·러·중)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간 북한의 핵실

험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왔다. 북한의 로켓 발사(2009.4.5)에 대해 안보리 의장성명(2009.4.13) 채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북한의 핵실험(2009.5.2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결의안 협의 전 과정에 P5+2(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일)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기존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2009.6.12일)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P5+2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도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동하고 있다.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안보리 결의 1718호(06.10.14)	안보리 결의 1874호(09.6.12)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상 7대 무기류, 관련물자, 부품 • NSG, MTCR, AG 통제품목 • 여타 안보리 또는 제재위 지정 WMD • 미사일 관련 품목 등	•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대외수출 금지(op.9) •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 이전·수출 금지(op.10)
화물 검색	• 자국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에 따른 금지 물품(대부분 상기 금수 무기, 특히, WMD·미사일 관련 물자)을 적재한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조조치(cooperative action) 제공(op. 8(f))	•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op.11)
금융·경제 제재	• WMD·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자금·여타 금융자산 및 재원 동결 및 이전 금지(op. 8(d))	• 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op. 18)

한편 대화를 통한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음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10년 6월 결의 1929호를 채택하였다. 결의 1929호는 이란 향발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제재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 결의 1929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10년 9월 8일 정부조치를 발표하는 등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협상과 제재 병행 전략'에 따라 2010년 12월 E3+3과 이란간 대화가 14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나, 양측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다자핵연료공급보장(MNA: Multilateral Nuclear Assurance) 분야에서는 2010년 3월 러시아의 LEU 저장소 설치를 위한 러시아-IAEA간 협정 서명과 2010년 12월 IAEA 핵연료 은행 설치를 위한 IAEA 결의안 채택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운용국으로서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공급보장이라는 MNA 논의의 원칙적 측면을 지지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러시아의 LEU 저장소 설치 결의안에 이어 2010년 IAEA 핵연료 은행 설치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IAEA 핵연료은행 결의 채택을 계기로 앞으로 IAEA내에서 MNA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다수의 MNA 제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논의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2]의 이행과 관련, 현재 미국, 러시아, 리비아가 폐기 작업을 진행중이며, 2012년 폐기완료 의무 불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들간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우리정부의 경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3] 아시아지역 국제화학방호교육 개최(5월 16-20일, 서울), OPCW 산업사찰 에스코트 훈련과정 실시(4월 12-14일, 서울)에 이어 2년(2011년 5월-2013년 5월) 임기의 OPCW 집행이사국에 재선임됨으로써 OPCW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4] 당사국들은 2010년도 작업의제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생물무기 피해국 지원」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8월 BWC 전문가회의시 생물테러를 예방·대처하기 위한 국내 역량 강화 조치 및 관련 국제협력 현황을 소개한 작업문서를 제출하고, 12월 개최된 BWC 당사국 회의시 G20 정상회의 계기 생물테러 예방 및 대응 관련 노력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였다. 한편 2011년 제7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측이 검증의정서 불추진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법적구속력을 지닌 이행체계가 결여된 BWC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다.
3) CWC 제8조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동 협약 발효 직후인 1997년 5월 헤이그에서 설립되었다. OPCW는 CWC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검증체제를 포함하여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며, 당사국간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4)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세균(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다.

2)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간 공조 참여

우리나라는 WMD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참여국들과의 정보·경험 교류 강화를 위하여 2009년 5월 26일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5]에 정식 참여하였다. 이후 2010년 9월 호주 아태지역 운영전문가그룹 회의 및 항공차단 훈련(Pacific Protector 10)에 참여하였고, 10월 우리 주최로 PSI 해상 차단훈련 Eastern Endeavor 및 PSI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특히 참여 1년 반 후인 2010년 11월 PSI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 가입하여 국내 WMD 확산 방지 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PSI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PSI 참여국 현황 (2011년 2월 현재)

지역	참여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피지, 일본, 마샬군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사모아, 바누아투, 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앙골라, 바레인, 지부티,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오만, 카타르,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예멘, 라이베리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유럽·구소련지역 (53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미주지역 (13개국)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칠레,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미국, 콜롬비아, 앤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한편 G8 글로벌 파트너십(GP: Global Partnership)[6]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어 러시아 퇴역 핵잠수함 해체 사업, 우크라이나 핵밀수 방지사업(NSOI: Nuclear Smuggling Outreach Initiative) 및 예멘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계속하였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를 반영, 연구용 원자로 운용에 관한 중동지역 워크샵 개최 사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등, G-8 GP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WMD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G-8 GP 사업 참여는 WMD 비확산 분야에서 우리 신뢰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5) PSI란 WMD 확산 우려국가 및 집단의 WMD 및 미사일, 관련 장비·물자·기술의 불법이전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조 체제이다. 2003.5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95개국이 공식 참여중이다.

6) G-8 GP는 9.11 테러 이후 핵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구소련 지역의 WMD를 관리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간 조정 및 국제적 재원 확보 필요성에 따라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되었다.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7]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11년 제7차 GICNT 회원국 총회 국내 개최를 추진하여 동 회의 유치를 확정하였다. 6월 29-30일간 개최될 예정인 회원국 총회는 이행평가그룹(IAG) 회의에 연이어 진행되며, 82개 회원국 및 IAEA, EU 등 대표 200여명이 참석하여 중점활동분야인 핵탐식 및 핵감식에 관한 최적관행 발굴, GICNT 및 IAG 회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핵안보 분야에서의 우리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핵테러 대응에 대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 및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재래식무기 분야에서의 활동

대인지뢰 및 확산탄 규제 논의와 관련, 대인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Anti-Personnel Mines)[8]과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9]이 각각 1999년 3월과 2010년 8월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한반도 안보 상황상 대인지뢰와 확산탄의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상기 협약에는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 인도적 피해 경감 필요성에는 공감하여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10]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소형무기의 무분별한 확산 및 불법거래 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소형무기 및 경화기의 불법거래 방지,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계획(UN PoA)[11]' 및 '불법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TI)[12]'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재

7) 2006년 7월 미·러 양국은 핵 물질의 불법거래 탐지능력 강화와 정보 교환 촉진에 중점을 둔 국제 협력체제로서 세계핵테러방지구상을 발표하였고, 동년 11월 13개 원회원국과 IAEA(옵서버)의 GICNT 원칙선언(SOP: Statement of Principles) 채택을 통해 공식 출범하였다.(우리나라는 2007년 5월 가입) 동 구상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닌 자발적 성격의 국제적 협력체이다.

8) 대인지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their Destruction, 일명 오타와 협약)은 1997년 9월 체결되어 1999년 3월 발효되었다.(2011년 2월 현재 당사국 156개국)

9) 동 협약은 노르웨이의 주도로 시작된 협약으로(일명, 오슬로 프로세스), 원칙적으로 모든 확산탄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2월 16일 부르키나 파소와 몰도바가 유엔에 동 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발효를 위한 30개국 비준이 이루어져, 2010년 8월 발효되었다.(2011년 2월 현재 당사국 51개국)

10) 동 협약의 정식 명칭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다. 우리는 동 협약 및 제1의정서, 개정제2의정서, 제5의정서에 가입중이며, 현재 확산탄 의정서를 위한 협상에 참여중이다.

11) 소형무기 불법거래방지 유엔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은 2001.7.9-20간 개최된 소형무기 불법거래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2) 불법소형무기 표지 및 추적에 관한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 to Enable States to Identify and Trace in a Timely and Reliable Manner, Illicit Small Arms and Light Weapons)는 2005년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규범 마련을 위해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성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이다.

4) 유엔 차원에서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성과

2010년도 제65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는 2008년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되어 채택되었던 '무기 불법중개 활동 방지'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채택함으로써 유엔 회원국들 모두가 무기 중개활동을 규제하는 국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불법 무기중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와 공동으로 매년 제주 국제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제9차 회의에서는 최근 '원자력 르네상스'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 도입 열기와 2012년 우리나라의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 등을 감안, "원자력 르네상스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놓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비확산 및 핵안보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2011년 2월)

구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및 기타
국제협약	NPT	68.7 채택 70.3 발효	190개국 가입	한국 75.4 가입 북한 85.12 가입, 03.1 탈퇴선언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등
	CTBT	96.9 채택 현재 미발효	153개국 가입 182개국 서명	한국 99.9 가입 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CWC	93.1 채택 97.4 발효	188개국 가입	한국 97.4 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등
	BWC	72.4 채택 75.3 발효	163개국 가입	한국 87.6 가입 북한 87.3 가입	이스라엘 등
	대인지뢰금지협약 (오타와협약)	99.3 발효	156개국 가입 (133개국 서명)	남·북한 미가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CCW 제1의정서 개정제2의정서 제3의정서 제4의정서 제5의정서	83.12 발효 83.12 발효 98.12 발효 83.12 발효 98.7 발효 06.11 발효	113개국 가입 111개국 가입 95개국 가입 107개국 가입 99개국 가입 69개국 가입	한국 01.5 가입 01.5 가입 01.5 가입 미가입 미가입 08.1 가입	북한 미가입
	CCM	08.5 채택 10.8 발효	104개국 서명 30개국 비준	남·북한 미가입	미, 중, 러, 터키, 인도, 이스라엘 등
국제기구	IAEA	56.10 헌장채택 57.7 설립	151개국 가입	한국 57.8 가입 북한 74.6 가입 94.6 탈퇴	
	CD	84.2 설립	65개국 가입	남·북한 96.6 가입	

구분		협약 발효	가입국	남/북한 현황	주요 미가입국 및 기타
국제기구	COPUOS	59. 설립	70개국 가입	한국 94.9 가입 북한 미가입	이스라엘, 뉴질랜드,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체제	NSG	78.1 설립	46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등
	ZC	74.8 설립	36개국 가입	한국 95.10 가입 북한 미가입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AG	85.4 설립	41개국 가입 (EU 포함)	한국 96.10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러시아 등
	MTCR	87.4 설립	34개국 가입	한국 '01.3 가입 북한 미가입	중국, 파키스탄, 인도, 시리아, 이스라엘 등
	WA	96.7 설립	40개국 가입	한국 96.7 가입 북한 미가입	벨라루스, 이스라엘, 중국, 인니 등
기타	HCOC	02.11 설립	130개국 가입	한국 02.11 가입 북한 미가입	중, 브,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PSI	03.5 설립	98개국 참여중	한국 09.5 정식 참여	중, 인도, 파, 인니, 이란, 이집트 등

7. 대테러 국제협력

1) 국제 테러 정세와 대테러 국제 협력

9.11 사건 발생 이후 대표적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대두된 테러는 전 세계 문명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로 주요 테러세력의 거점 약화, 테러자금 차단, 국경보안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 세력들은 마약·납치·인신매매·불법 무기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와의 연계, 첨단 통신기술 악용 등을 통하여 그 수단과 조직을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법집행 강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체제 확립, 테러자금 조달 방지, 테러 조장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대테러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대테러 역량강화 지원, 문명간 대화 등 상호 이해 증진, 빈곤퇴치, 그리고 개발 협력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취하고 있다.

2) 우리의 대테러 국제 협력 현황

(1) 기본 방향

우리 정부는 테러 행위를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동시에 테러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적으로는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유엔은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대테러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테러관련 국제협약, 유엔 범세계대테러전략(UN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과 함께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13개 국제협약 중 12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2005년 9월 16일에 서명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추진중이다. 또한 유엔 대테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국제테러리즘협약」의 조기 채택을 지지함과 동시에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금융 제재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0년 4월 제8차 ARF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참여를 통해 역내 대테러 정세를 평가하고 'ARF 사이버보안 전문가 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2010년 2월, 5월, 9월에는 APEC 대테러대책반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대테러 노력을 설명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간 공조에 참여했다.

(3) 양자협력

우리나라는 2010년 필리핀·호주·일본·중국·미국·러시아와 양자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양자 차원의 테러 정보교류 활성화,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시 상호 공조, 제3국에 대한 대테러 교육·훈련 지원 등 역량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3) 국내 대응체계 정비

연간 1,300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객,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국군 해외파병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도 해외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정불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 테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테러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 취약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시설 및 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당국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테러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테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7월 24일 개정 여권법 시행령을 발효하여 폭동·테러·천재지변 등의 위험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체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3)]

이 밖에도, 테러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합동 테러대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테러위협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에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테러 정책을 점검한 바 있다.

13) 여행금지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3개국(2011년 2월 현재)

Diplomatic Focus

해적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참여

해적문제는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관련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적 사건은 지난 5년간 1,600여 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해 54명이 사망했다. 또한 2009년 11월 30일 그리스의 초대형 유조선 Maran Centaurus호(300,000톤) 피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적 수법도 점차 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활동영역 또한 아덴만 일부에서 인도양 남동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해적행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70억불에서 120억불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해적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8-2009년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14], 2009년[15]에 이어, 2010[16]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⑯가 채택되었으며, 동 결의에 근거하여 외국 군함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을 포함한 해적 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연합해군(CMF: Combined Maritime Forces)의 군사 작전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제6위의 해운국이자 소말리아 해적 피해국으로서 해적 예방과 퇴치에 핵심적 이해를 갖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먼저 상기 5개의 안보리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결의 제1851호에 의거하여 창설된 '소말리아 해적 퇴치 연락그룹(CGPCS: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함을 파견, CMF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7차 CGPCS 전체회의 의장국을 수임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도했다. 또한 12월에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지부티 강령 신탁기금에 5만불을 기여함으로써 소말리아 인근 국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의 과도 정부가 군벌의 발호로 인해 장기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단시일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를 다방면에서 모색해 나갈 것이다.

14) 제1816호(08.06.02) : 해적 퇴치를 위한 외국 정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승인(6개월간) / 제1838호(08.10.07) : 소말리아 인근 공해 해역에 유엔 회원국의 군함·군항공기 파견을 요청 / 제1846호(08.12.02)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 제1851호(08.12.16) :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1년간)

15) 제1897호(09.11.25)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연장(1년간)

16) 제1918호(10.04.27) : 각국 국내법에 따른 해적 사법처리 방안 검토 / 제1950호(10.11.23)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연장(1년간)

제3절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1. 개관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문화외교가 외교력의 새로운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외교통상부는 2010년에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외교의 수행 주체와 대상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된 새로운 외교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삼고 공공외교 분야 상설 민간 자문기구인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출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민간법인·단체 해외 활동 지원 등 지자체와 민간의 외교 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다. 아울러 민간분야의 문화외교와 문화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아트 갤러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문화를 활용한 국가간 소통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류가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과 함께 공연, 전시회 및 영화제 등 각종 해외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가간 이해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문화셔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유네스코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문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문화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한식 행사, 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하고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예술품을 전시함으로써 재외공관 및 관저를 통해 우리 문화소개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동계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 증진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1) 공공외교 포럼 출범

오늘날 외교는 수행 주체와 대상이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NGO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로 확대되었고, 외교 수단도 정치·안보·경제 등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국가브랜드 이미지 등 소프트파워적인 요소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통상부는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추진하고, 이를 정무·경제외교와 함께 외교의 세 번째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을 공공외교 추진 원년으로 삼고, 우리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와 담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17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과 공동으로 '공공외교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공공외교포럼'은 학술, 언론, 사회, 문화, 경제 등 각계 공공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민간 자문기구로서,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정례 간담회,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공공외교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공공외교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연구 과제 수행 등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총체적인 외교력 강화를 위해 대외교류에 관한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의 대외교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가 외국과 체결한 자매결연·우호교류의 수가 1,100여 건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대외교류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매도시간 인적교류, 문화·예술·체육·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투자유치·해외시장개척 등 지자체의 대외활동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외교부-경기도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활동에 대한 양자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하였다.

또한 풍부한 국제감각과 경험을 가진 외교통상부 출신 인사들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문대사들은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수출증대 및 대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관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지자체의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3) 민간 법인·단체 활동 지원

외교통상부는 해외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외교통상부 법인·단체로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외교통상부에는 총 581개(비영리법인 468개, 비영리민간단체 113개)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58개(비영리법인 40개, 민간단체 18개)가 2010년에 신규로 등록되었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3월과 11월에 등록법인 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민간법인의 효과적인 해외활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비영리 법인·단체가 해외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민간법인 사이버커뮤니티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외교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중인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활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수의 공관에서 전통·현대무용,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남미·아중동 지역의 경우,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여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크지만 거리, 비용 문제 등으로 본국에서 문화사절단 파견이 쉽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미주·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재외예술인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활발히 개최하여, 우리 문화예술 홍보 및 국가간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2009년에는 알제리·코스타리카·일본 니가타 등 18개 공관에서 21차례, 2010년에는 칠레·에콰도르·세네갈·스페인 등 33개 공관에서 총 37차례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재외 예술인들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주재국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홍보하였다.

5) "사이버 아트 갤러리" 활성화

외교통상부는 2007년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아트 갤러리'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들이 외교통상부 소장 우수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아트뱅크) 소장품 중 재외공관에 임대된 미술품을 사이버 아트 갤러리에 게재하는 등 미술품 콘텐츠를 보강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문화소양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 아트 갤러리, cyberartgallery.mofat.go.kr

6)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 운영 (http://cafe.naver.com/culturalaffairs)

외교통상부는 2008년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각종 문화사업을 소개하고 문화외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카페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더욱 알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문화외교카페가 국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창구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culturalaffairs

3. 문화를 통한 국가간 소통 강화

1)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문화를 국내에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타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아프리카 문화축전'에 이어 2008년에는 '아랍문화축전', '실크로드(중앙아) 문화축전'을, 2009년에는 '한·중앙아 문화교류축제', '중남미문화축전', '2009 아세안문화축제'를, 2010년에는 '인도 영화제', '흑해문화축제', '한·몽골예술교류축제'를 개최하였다.

흑해 문화축제 포스터 및 불가리아 필립 쿠테프 국립민속무용단 공연 (2010.8.6 달오름극장)

특히, 외교부는 동 사업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 주한 공관, 상대국 국민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대국 국가에 대한 이해폭 확대를 통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일방향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해외 공연·전시

외교통상부는 2010년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한·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한·러시아, 몽골 수교 20주년 등 외교관계 수립 기념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교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국민들간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우수한 문화예술공연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한국현대미술 순회전을 개최하여 국제적 수준의 예술 역량 제고 및 우리 문화

베네수엘라 독립 200주년 기념 들소리 공연(2010.9.22, 베네수엘라중앙대 Sala de Concerito)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중남미 독립 200주년 기념 및 한·체코 수교 20주년 등 주요외교계기에 우리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여 다양하고 역동적인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간 우호친선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해외공연에는 현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인사·경제계·언론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초청되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현지 공관 관계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연 사후평가를 통해 지역별 문화적 수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 향후 실시하는 공연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3)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 하에 양자 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국과 문화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일본(3월), 멕시코(11월), 포르투갈(12월), 카자흐스탄(12월) 등과 문화공동위 혹은 문화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교류 전반에 걸친 현안과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가봉(10.25)과는 문화협정을, 포르투갈(4.5), 방글라데시(5.14), 터키(6.15)와는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하였다.

4) 동북아 문화협력(한·중·일 문화셔틀사업)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2007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시 미래지향적 우호친선 관계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정례적으로 3국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중·일 문화셔틀사업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7년부터 영화제, 유물전, 청소년 축제 등 매년 한·중·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2010년에는 9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2010 한·중·일 문화셔틀 콘서트 - 앙상블 디토(Ensemble Ditto) 리사이틀'을 개최하였다. 한·중·일 출신 젊은 클래식 음악가로 구성된 앙상블 디토가 한·중·일 음악 메들리, 드보르작, 슈베르트 등을 연주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중·일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한·중·일간 활발한 문화교류와 우호친선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3국간 문화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국가브랜드 가치 고양

1) 대유네스코(UNESCO) 외교 강화

외교통상부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과학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를 통한 이슈 형성과 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포함한 7개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 370여만불 규모의 신탁기금사업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문화·교육·인문 및 사회과학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 및 정보 교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기록유산 및 무형유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우리 유산 보호뿐 아니라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11월에는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무형유산 3점을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1999년 이래로 주프랑스대사관이 겸임하여 오던 주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2009년 독립대표부로 재개설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독립대사가 부임하는 등 우리의 대유네스코 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는 문화 분야에서 국제규범형성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에 대한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영향력을 확대하고 선진문화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 한식세계화에 대한 재외공관의 기여 확대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한식세계화의 전초기지로 활용, 각종 행사개최를 통해 우리의 식문화를 전세계에 홍보하여 전체적인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외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은 한식에 대한 폭넓은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0년도 100여개 재외공관은 주재국 외교단 및 정치·경제·문화 분야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식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리법도 홍보하고, 김치·비빔밥 등 주요 음식을 만드는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한식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특급호텔과의 협력을 통해 호텔 뷔페식당의 주요메뉴로 한식이 포함되도록 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3) 스포츠 외교 전개

외교통상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의 증진과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에 스포츠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22 FIFA 월드컵', '2018 동계올림픽',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태권도는 신한류의 콘텐츠로서 세계 각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태권도협회 등과 협력하여 매년 태권도 시범단과 사범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2010년에는 루마니아·체코 등 21개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으며, 남아공·네팔 등 12개국에는 태권도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 보급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알제리·파키스탄 등 20여개 재외공관에서는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의 확산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태권도시범단 공연 : 위〉 2010.9.18 루마니아, 아래〉 2010.9.11 체코

4)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의 해외진출 지원

외교통상부는 한류로서 파급력이 큰 드라마의 해외방영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프리카·중남미 등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드라마가 방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대장금', '겨울연가', '내 이름은 김삼순' 등 대표적인 한류드라마가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니카라과, 에콰도르, 페루, 가나, 가봉, 모로코, 세네갈 등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찬란한 유산', '바람의 화원', '선덕여왕', '주몽' 등의 드라마가 새로 수출되어, 피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라루스 등에서 방영되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아리랑TV와의 협력 하에 한국 홍보 영상물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외국 방송사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에서의 우리 드라마 및 기타 영상물 방영은 에너지·자원 외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영화의 수출시장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 이름은 김삼순」, 「선덕여왕」, 「찬란한 유산」, 「바람의 화원」 (시계방향)

베를린·칸느·베니스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우리 영화의 출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의 국제영화제에 외국 영화 및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협력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주도하는 한국영화제 및 한국영화 상영행사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우리 영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5)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및 현대예술품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Art Bank) 미술품 임차지원, 2009년도부터 문화재청과의 협조 하에 전통공예품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외 공관에 다수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2010년에는 이집트·덴마크를 비롯한 10개 공관에 미술품 60여점, 전통공예품 28점을 지원하였으며, 제네바·이스탄불 등 12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에서 임대된 미술품 160여점의 임대기간 연장을 지원하여 재외공관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그림·도자기 등 우리나라의 우수 예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및 한국어 보급

외교통상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전문가(知韓인사)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대학의 교수직 설치, 객원교수 파견, 한국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펠로십 등 연구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 기반확대를 위해 50개국 89개 대학에 97건의 교수직 설치 및 강좌운영, 16개국 50개처 85건의 한국학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한국 전공 대학원생 및 한국어 교원 27개국 50명의 방한 한국어연수를 지원하였으며, 한국 학자와 전문가 22개국 50명의 방한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17개국 19명의 개발도상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한국언어문화연수를 시행하였고, 해외 14개국 165명의 한국 전공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밖에도 한국 관련 교육자료 9건의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11개국 중등학교 교육자 대상 한국학 워크숍을 국내 및 현지에서 총18건 개최하였다.

7) 테마형 문화외교사업

외교통상부는 인류 공동의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적 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한 선진문화외교의 일환으로 '테마형 문화외교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빈곤', 2009년 '기후변화'에 이어 2010년에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명·자연·상생을 다루는 공연('나무', '광합성엑시톤')과 전시('Greening Green 2010')를 개최하였다. G20 정상회의에 맞추어 11월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한 종합문화행사에 총 3,000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녹색성장' 주제의 문화공연, 「나무」 (2010.11.10 아르코예술극장)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대외관계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준칙이 되는 국제법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바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국가들의 상당 기간 동안의 보편적인 관행과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법원화되는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인 조약[1]은 그 명확성과 신속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외교정책 수립시 정당성을 제고하였으며,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주창되고 있는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이익을 국제법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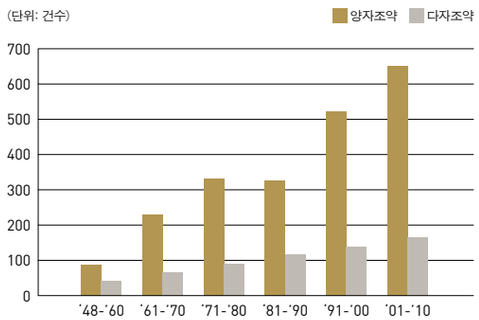
1. 2010년도 조약 체결

1948년 정부수립 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2,746건(양자 2,146건, 다자 600건)이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간 발효된 조약이 126건(양자 88건, 다자 38건)에 불과한 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발효된 조약은 811건(양자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조약을 '단일의 문서나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

정부수립 이후 조약 발효 건수 추세 (2010.12.31 현재 발효기준)

연도	'48-'60	'61-'70	'71-'80	'81-'90	'91-'00	'01-'10	소계
양자조약	88	231	329	326	523	649	2,146
다자조약	38	62	90	112	136	162	600
총계	126	293	419	438	659	811	2,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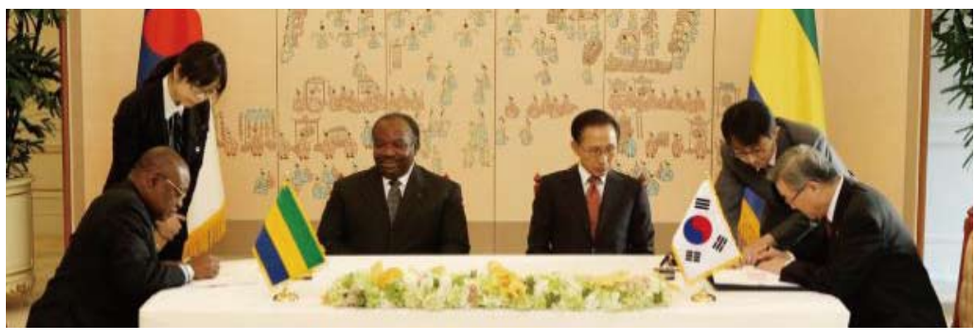


649건, 다자 162건)에 달한다.

2010년에는 양자조약 66건과 다자조약 14건, 총 80건의 조약이 발효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 2009년 8월 서명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010년 1월 발효되어 대인도 교역량 및 인도인의 입국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심화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브뤼셀에서 서명되어 5억여명의 인구와 국내총생산 16조 4천억불(2009년, IMF 기준)에 이르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인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한·부르키나파소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의 투자협력을 증진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우리나라 투자 이익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가봉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에스토니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가 서명 또는 발효되었고, 불가리아·슬로바키아·폴란드·루마니아 및 오스트리아와는 각각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들 조약



한·가봉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식 (2010.10.25, 서울)

을 통해 소득세의 이중과세와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과의 협력분야에서는 무상 및 유상원조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한·엘살바도르 무상원조사업 기본협정」과 「한·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약정」이 서명·발효되었으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앙골라·모잠비크·탄자니아·콜롬비아·스리랑카·니카라과·방글라데시·라오스·우즈베키스탄 및 요르단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협정 및 약정이 각각 서명·발효되었다.

사법공조 분야의 경우 우선 불가리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이 2010년 4월에 발효되어 형사사건과 관련한 양국간 사법공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과는 2005년 발효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에 이어 수형자이송조약이 2010년 8월에 발효되어 베트남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잔여 수형기간을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불가리아·스페인·영국·폴란드·호주 등 5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발효되어 군사정보교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일본·중국 3국 정부 간 최초로 체결되는 조약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2010년 12월 16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는데, 동 조약이 발효되면 3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이외에도 다수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우선 환경 분야의 경우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기존 협약에서 규정하던 유류오염 사고발생시 손해에 대한 최대 보상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최초의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규정인 「국제재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 (2010.12.16, 서울)

생에너지기구 규정이 발효되어,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외에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여타 당사국간 사법공조가 증진될 전망이며,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어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수문화 및 다문화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제법적 기여

대외정책이나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정당성과 국격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선진 일류 국가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외교정책이 국제법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외교안보·재외국민보호·영사·문화에 걸친 제반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국제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는데,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발, 조선왕조의궤 반환, 서해상 중국어선의 침몰 등의 사례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한편 2010년 12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추관이 북한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예비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개시하였는바 [2], 정부는 이번 예비조사와 관련하여 ICC 로마규정(Rome Statute) 당사국으로서 ICC 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조사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2) ICC 수사는 ICC 로마규정 당사국의 회부, 안보리 회부 또는 소추관(Prosecutor) 독자수사로 개시될 수 있으며, 예비조사란 소추관이 수사 전 단계에서 ICC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임.

3.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의 참여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 총회 제6위원회,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ague Conference)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국제법률기구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법 제반 분야에 걸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회의의 성과도출에 공헌하였다.

우선 정부는 ICC 로마규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당사국 간의 의견 조율 및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간다에서 개최된 재검토 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침략범죄 개정안이 채택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5월 개최된 제3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극 제2기지 건설을 공식 발표하고 당사국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회의 참석 전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설득 작업을 전개한 결과 당사국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로부터 지지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2010년 3월 개최된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관련 콜로키움에서 온라인분쟁해결 논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여 2010년 7월 UNCITRAL 본회의에서 온라인분쟁해결 실무작업반을 신설키로 결정하였다.

ILC 의제인 '외국인의 추방'과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내법, 관행 등 관련정보와 의견을 유엔에 문서로 전달하였고, 제65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는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임무중인 유엔직원의 형사책임'과 '국제적·국내적 법치주의' 결의안에 우리의 제안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한편 ICAO의 이사국에 네 번째 연속으로 선출되었고, ICAO 항행위원회 부의장,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 유엔 총회 제6위원회 부의장 등을 우리나라 인사가 수행하는 등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최근 북극해빙의 가속화, 국산 쇄빙선 아라온(Araon)호의 북극 탐사 등 국내외적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차관급회의 및 고위실무회의(SAO: Senior Arctic Officials) 등에 임시 옵저버(ad hoc observer)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4.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및 안정적 해양질서 관리

우리나라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한 이래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해·남해·동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웃나라인 일본 및 중국과 각각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일본과는 2010년 6월에 제11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였고, 중국과는 2010년 12월에 과장급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경계획정 작업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한편 이웃나라와의 해양경계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해양과학조사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동의신청서 제출부터 조사 수행시까지 이웃나라와 마찰이 없도록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였다.

5.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5월에는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국제관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에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시로 재외공관 파견대상 주재관·지방자치단체 국제업무담당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제법 분야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학계·외부전문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저명학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국제법 역량을 홍보하고자 한·중·일 국제법 학자 18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2명을 초청하여 최초로 '동북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사무

처장과 ITLOS 사무차장의 방한시 국제법학회와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한편, 유엔 사무국 법률실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의 공동연수 형식으로 개최하는 지역 세미나(Regional Seminar)의 서울 개최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제10회 논문 경시대회를 실시하였고, 국제법 저변 확대사업의 추진에 참고하고자 로스쿨 학생과 법대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법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13개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국제법률국의 업무를 소개하였으며, '국제법 동향과 실무'라는 계간지를 발간하여 국제법 관련 주요문서, 국제사법기구의 최신 판결, 조약체결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조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 및 2009년도 '양자조약집'과 2007년도 및 2008년도 '다자조약집', 그리고 '다자조약개황'과 '알기쉬운 국제법률기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학자 및 대학생을 포함하는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